

===== 【 기술보호와 법 】 =====

<< 창업 꿈나무가 알아두어야 할 법제도 >>

I. 창업의 의의

1. 창업의 개념

(1) 개념

- 창업은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기업은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 묻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기업이든 새로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창업의 범위에 속한다.

(2) 형식

- 창업은 창업자 개인이 단독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동업을 하는 경우 및 회사 등의 법인 설립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업의 형태

- 창업자가 단독의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는 경우와 타인과 함께 동업하여 창업하는 경우 및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 개인이 단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형태를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1인 설립이 가능한 회사법인으로 창업할 것인지 정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형태를 회사법인 형태로 할 것인지도 정하여야 한다.

II. 기업의 형태

1. 개인기업

(1) 특징

- 창업자가 단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인 창업이 가능한 회사법인에 의한 창업도 가능하다.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창업자의 판

===== 【 기술보호와 법 】 =====

단에 다른 것이다.

- 개인기업 형태의 창업은 창업자 스스로 영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다. 흔히 '자영업'이라고 한다.

(2) 장점

- 창업절차가 간단하고 창업비용도 적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 창업하는 기업 경영에 관한 방침과 계획을 창업자가 자유롭게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영업 이익도 전부 창업자 자신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며, 결산 처리에 있어서도 대차대조표와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나, 법인의 경우와 같은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 창업 후 영업의 양도도 창업자가 단독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 단점

-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손실 전부 창업자에게 귀속되며, 영업상 채무에 대해서도 창업자가 단독으로 직접 무한 책임을 진다.
- 자본금 조달에 창업자 개인 능력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4) 창업절차

- 창업자가 개인기업의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점포나 사무실에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 창업자가 미성년자나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민법 일반 원칙에 따라 창업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야 한다.

2. 회사 - 주식회사

(1) 의의

- 주주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본금을 그 존립의 기초로 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시 자신이 이니수한 주식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회사 채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이다.

(2) 조직과 운영

1) 주주

===== 【 기술보호와 법 】 =====

- 주주는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주식의 소유자이다.
-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만 부담하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2) 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는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회사에서 필요기관이다.
- 이사회와 감사기관은 회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자본금 10억위너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 1명이나 2명을 둘 수 있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중규모회사에서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을 두어야 하며 감사기관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 회 중 하나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사

- 중규모 및 대규모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 이사 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 등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를 한다.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 상장회사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집행임원은 대표이사에 갈음하여 이사회와 감사 아래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4) 감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이익배당

-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 주식배당 : 이익배당을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 기술보호와 법 】 =====

(3) 회사의 설립

- 주식회사는 자본을 중심으로 하므로 회사 설립에서 자본의 형성과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형성절차와 설립경과 조사절차가 요구된다.
- 주식회사 설립사무는 발기인이 집행하는데, 발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발기인조합을 구성한다.
- 발기인조합은 회사가 성립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해산한다.

1) 발기인

-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이며 회사 설립의 사무를 집행한다.
- 발기인의 수는 1인이면 되고, 발기인의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2) 정관의 작성

-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먼저 발기인이 법정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것을 말한다.

3)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 목적 : 회사가 수행할 영업의 범위를 말한다.
- 상호 : 주식회사라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보험·은행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상호 중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문자도 있어야 한다.
- 발행주식의 총수 : 회사가 성립 후 존속 중에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의 총수를 말한다.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회사가 공고를 할 때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할 것인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원시정관으로 기재하게 한 것이다. 전자적 방법은 공고할 사항을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하면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그 기재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기재하지 않으면

===== 【 기술보호와 법 】 =====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이다.

(4) 상호

- 상인이 영업활동에서 자기의 영업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 자연인인 상인은 자기의 성명 이외에 자신의 영업활동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호를 사용하며, 회사 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의 명칭이 상호가 된다.
- 상호는 영업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표시하며, 영업에 관한 명성과 신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 상호 선정의 자유 : 상인이 상호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성명 기타 명칭으로 상호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회사의 상호에는 회사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은행, 보험, 증권 등 특수한 영업을 하는 회사는 그 상호에 은행, 보험, 증권 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회사가 아닌 상인은 상호 중에 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개인상인의 상호는 그 등기 여부가 상인자유이다. 회사의 상호는 회사의 설립등기사항으로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주주총회

Ⅲ. 창업

1. 창업 일반 절차

(1) 사업계획서 작성

- 창업을 하는 경우에 창업자가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수익성을 창출할 것인지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기술하는 것이다.
- 사업의 비전과 목적, 조직, 성장잠재력, 시장현황과 변화 추이, 제품과 마케팅 등의 사업전략과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의 자가진단 수단이자 대외적으로 각종 지원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2)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 사업계획서의 용도는 대내적 목적과 대외적 목적으로 구분된다.

===== 【 기술보호와 법 】 =====

- 대내적으로는 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사업의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내부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는 수단이 된다.
- 창업자는 창업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창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창업 비용을 절약하고 창업의 시행착오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대외적으로는 금융이나 투자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또는 정부나 지자체, 신용보증, 기술보증 등 각종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용된다.

(3) 기재사항

- 사업의 아이템과 창업의 목표, 경영조직과 앞으로의 생산·판매·자금조달 등의 각종 계획, 미래 발전 방향 등 당해 기업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기재사항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창업기업형태의 구분

(1) 벤처기업의 창업

- 벤처기업은 창업의 위험성이 크고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창업하여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첨단 신기술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기술집약적 신생중소기업을 말한다.
-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기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2) 인터넷창업

- 인터넷 대중화로 인터넷 창업이 많아지고 있다.
- 분야로는 인터넷 쇼핑몰, 정보 및 서비스 판매, 인터넷 교육, 인터넷 금융, 인터넷 출판, 인터넷 방송, 인터넷 광고 등 다양하고 독창적인 창업이 많다.

(3) 인수창업

-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টে으로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의 영업을 인수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 인수창업이라고 한다.
- 기존 영업에 관한 시설이나 권리, 노하우 등을 승계하여 창업에 소요되는 위험 부담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1) 영업인수

- 영업을 하던 양도인으로부터 그 영업을 인수하여 창업을 하는 것이다.
- 인수창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계약이다.

2) 인수의 요건

- 영업의 물적·인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 기능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인적 조직의 승계를 중시하고 있다.
- 따라서 인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의 물적 설비를 모두 인수하더라도 기존 종업원들을 전부 해고 하는 경우에는 인적 조직을 승계한 것이 없으므로 영업의 인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 동일한 사업주로부터 특정 지점의 영업만을 이전받는 것은 영업의 일부 인수로 되지만, 단순한 출장소나 공장 등의 인수는 영업재산의 인수이며 영업의 인수가 되지 않는다.

3) 인수인의 영업재산이전청구권

- 영업인수계약이 체결되면 영업인수인은 양도인에게 인수의 대상인 영업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양도인은 인수인에게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영업재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 영업재산의 이전 방법으로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등기, 등록, 인도, 배서·교부 또는 단순한 교수 등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영업상 비결과 고용관계 등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영업 인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인이 개별적으로 전수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야 한다.
- 영업의 인수에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기존 근로계약관계도 인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승계된다. 영업의 인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때에는 실질적인 해고이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불승계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이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에서 10년간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 인수인과 양도인 사이에서 경업금지기간을 이 기간보다 더 장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는 인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의무이다.

===== 【 기술보호와 법 】 =====

- 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계속한다면 그 인수인은 영업인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영업의 인수인이 그 영업인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